

새 교육정책과 기독교교육

◎ 김정호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장)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새 정부는 우리교육이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교육부사이트, 2013)',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교육과 교육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2013년 2월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등에서 주최한 대규모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진단과 언론보도에서는 이번 교육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이번 교육정책은 '복지가 다소 과다하게 강조되어진 측면이 있지만 학교교육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취약층에 대한 복지강화에 주력하는 것을 대체로 환영했다. 다만 그 실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즉 학교와 사회의 준비도 문제나 우리사회의 교육문화 토양으로 인한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최근 2013년 3월 28일에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목표 3가지를 결정하고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정책비전 : "행복교육, 창의 인재 양성"
- 교육목표 : 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출처: 교육부 웹사이트 (2013. 4. 3.)

첫째, 학교교육정상화추진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2013년 2학기 연구학교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 완전도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개선(초등학교평가제치 및 중학교 3과목으로 축소) 맞춤형 진로설계지원(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진로교사배치) 여성체육교육 활성화지원, 학교폭력 제로환경조성, 교원당학생수감축, 대학입학전형간소화 등과 둘째, 능력중심 사회기반구축을 위하여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고교직업교육강화(마이스트교지원강화) 전문대학의 취업능력 다양화와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화,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 지방대 특성화분야 전액장학금 지원방안 마련 등을 그리고 셋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기능강화, 방과후 돌봄 및 추가돌봄 무상화, 2017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도입, 선행학습유발시험을 막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추진, 소득연계형 대학반값등록금도입, 육아교육과 보육 통합로드맵마련 등을 실천과제로 내놓았다.

새 교육정책의 진단

이러한 교육정책이 우리사회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이번 교육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보다는 개인필요 그것도 특히 취약계층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발전을 우선과제로 하여왔고 이에 '개인의 성숙'이라는 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는 크게 못미쳐왔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단지 학교교육내의 처방뿐아니라 우리사회전반의 교육문화를 바꾸고자하는 의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력사회에서 능력기반사회로의 변화를 의도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교육문화가 가지고 있는 병폐, 즉 대학의 간판과 스펙이 개인의 능력과 사람됨보다 우선시 되고 이러한 것에 의한 라벨링이 평생을 좌우하는 학력사회의 병폐에 대한 처방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새 교육정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마이스터교나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고졸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이들의 대학교육과 해외유학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대학과 지방대학을 강화함으로써 한번의 입시가 인생을 좌우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단계에서도 중단했던 교육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정책이 학교간판보다는 능력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갈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지난 정부들의 교육정책 실행과정에서 보아온 좌절들이 성급한 기대를 보류하도록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억제하려하였다. 그러나 자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평가가 강조되었고 이를 통해 학교들을 서열화하는 문제가 야기되었고 입학사정관제나 교과군제 등을 도입하여 단편적 지식암기를 지양하고 학력제고를 의도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높이고 입시주요과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파행적인 교육을 가중시키는 야기시켰다는 일선교사들의 평이다.

이번 교육정책 역시 그 시행과정에서 더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첫째, 교육부 교육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교육정책들이 관계부처 즉 미래창조과학부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나올 수 있다. 지난정부의 교육과학부에서 분리확대된 과학관련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첨단과학발전을 위한 우수인재양성과 선발, 그리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강조하고 나올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문제가 미래에 중요한 변수가 됨으로써 노동력확보때문에 입직연령조기화를 위한 교육부의 의도와는 다른 또 다른 정책이 나올수 있다. 이미 지난 3월 일선학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상위 5%의 우수인재에게 조기 진급과 졸업을 허락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둘째, 교육부가 꿈꾸는 능력중심사회의 새로운 질서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교육적 지원 뿐아니라 고용 및 창업의 기회와 봉급체계의 변화가 함께 따라와야 실현가능성이 있다. 즉 이것은 교육 뿐 아니라 고용쪽에서도 함께 발맞추어져야하고 학력에 따라 혹은 초기 자격증획득에 따라 평생 봉급체계가 결정되어지는 우리사회의 학력위주의 봉급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함께 따라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사회전반의 인식의 전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력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복지가 강하게 강조된 이번 정책은 실천되는 과정중에 교육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화한 다든가 학교가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기 보다는 대처하게 될 우려를 하게 한다. 정부는 교육정의의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학부모가 가정을 통해 하여야 하는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교육의 여러 한계 때문에 공교육체제를 벗어나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질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정부의 교육복지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새 교육정책에서 바뀌어야 할 대전제: 교육의 물질주의
입시문제를 해결하여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잡으려는 노력은 사실 이전의 어떤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그리 성공





적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 교육의 뒤에 있는 대전제를 파악하고 이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교육정책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우리아이들은 입시교육에 묶여있고 사교육을 떨쳐버리기 힘들지 모른다.

그 대전제는 교육의 물질주의이다. 즉 물질주의화된 교육이란 교육목표는 경제사회적 성공이요, 그 수단인 교육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느 학원의 홍보간판에 “가장 확실한 인생의 역전은 교육을 통해서”라는 글은 우리의 정곡을 찌른다. “공부를 잘하여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명예를 얻고 삶의 보장을 받는다는 생각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5만원짜리 학습지보다는 30만원짜리 학원이 낫고, 그보다는 50만원짜리 과외가 그리고 그보다는 몇백만원짜리 쪽집계과외가 더 낫다는 생각!” 이것이 교육의 물질주의의 단면이다. 이러한 대전제에 대한 자각과 경계심이 없다면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하는 동안 사교육시장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많은 상품들이 호황을 누릴지도 모른다

우리가 개인의 물질적 성공을 위한 교육에 더 이상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진국의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국가 GDP 1-2만불시대를 맞이한 국가들은 개인의 인적자원개발과 함께 개인대 개인의 신뢰 그리고 개인대 사회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주력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곧 개인개발을 극대화하여 부를 창출한다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개인개발교육과 함께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말이다.

최근 20여년간 기독교교육계는 기독교대안학교운동, 기독교교육과정재구성, 미션스쿨의 재건 등 기독교세계관에 의해 우리의 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독교교육은 우리자녀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드렸고 우리사회교육을 고통받게하는 물질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기독교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입시에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고만 가르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우리가 진저리 쳐야하는 사단의 트랩이 있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용기가 없거나 그 계략에 눈치를 채지못하거나 이 둘중에 하나이다.

우리사회와 우리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기독교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인생의 반전은 교육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을지. 마태복음 19장의 모든 계명은 지켰지만 가진 것을 내어주지 못해 주님을 떠난 안타까운 부자청년이야기를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를 종교인을 만들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주의적 교육을 거스르므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기독교교육에서 해야할 일이 아닐지. 우리에게 먼저 우리자녀들이 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들이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새 정부의 교육정책 특징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하였고 이후에는 계속하여 이러한 정책에 대응한 기독교교육학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정희영/전 기독교학문연구회장), 이 정책들이 기독교학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마병식/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 사무총장), 그리고 기독교교육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정병오/ 좋은교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정효 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이자 이화여자여자대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장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Ph.D.를 취득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 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